

최대 180일간 심리... 한덕수 총리, 대통령 직무 대행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헌재)에 탄핵의 공이 넘어갔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재에 접수하면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탄핵소추의결서(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인용 혹은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곧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盧 전 대통령 63일·朴, 91일 소요...재판관 3명 공식 '변수'

헌재·형사재판 동시 진행시 심판 절차 정지 규정도 지체 가능성

들어간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배당으로 이뤄진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가 심리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 등을 들여다보고 결론을 낸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공개변론,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심리 기간은 180일 이내지만 더 짧을 수 있다. 탄핵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문제는 헌재 헌법재판관 6명뿐이라는 데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해 9명 중 3명이 공식(公席)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헌재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1항)상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져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해당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 역사 재판관 6명으로 도 심리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심리는 하더라도 결정까지는 무리라는 입장도 있다.

이에 국회가 재판관 3명을 뽑아, 권한대행을 통해 서둘러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성향의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대통령에 추천한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유지 뿐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전 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헌재법상(제51조)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내란혐의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내란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과정이 진행되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당장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 조항 때문에 정지돼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51조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헌재가 대통령직을 권한대행체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민중, 탄핵 추진 두번째 만에 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세번째... 노무현 '기각', 박근혜 '인용'

대통령 탄핵의 역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박근혜에 이어 8년 만에 가결되면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역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대상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한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거센 반발에도,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야당 주도로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의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등의 발언 내용을 꼬투리 삼아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개월 여만인 같은 해 5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직무 정지됐던 노 전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했고,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야권은 곧바로 이어진 17대 총선에서 역풍을 맞고 참패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어 2016년 탄핵 대상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끝은 노 전 대통령과 달랐다. 바로 파면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시 '비선 실세', '문고리 3인방' 등의 핵심으로 거론된 최서원(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

당 의원도 상당수가 동참했다.

헌재는 2017년 3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최서원씨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을 대표적인 파면 사유로 지적했다.

윤석열 '내란죄' 심리... 전직 대통령 탄핵 결정, 3개월 이상 안걸려

당 의원도 상당수가 동참했다.

헌재는 2017년 3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최서원씨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을 대표적인 파면 사유로 지적했다.

이날 역대 세번째 탄핵 대통령에 이름을 올린 윤석열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과의 파면 상황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많다.

우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뇌물수수 등이었다. 검찰 수사와 기소 이후 탄핵이 추진됐으며, 탄핵소추안도 공소장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당시 한 달 넘게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상황 등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촛불 집회를 통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0월 말 국정 지지율은 17%대로 주저 앉았고, 탄핵 표결 직전까지 4~5%대의 역대 최저 지지율에 머물렀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내란죄 피의자 신분으로, 모든 국민이 계엄 상황을 실시간으로 직접 겪었다. 다시 말해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셈이다. 국민들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공포·불안과 수치심을 줘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2월 3일 밤에 겪은 단 하루의 계엄 충격만으로 국민 여론은 탄핵을 넘어 대통령 '하야'로 향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도 계엄 직후인 이날 첫째 주 16%, 둘째 주는 11%로 떨어졌다.

국민 분노와 국정 지지율 추락 등은 2016년과 2024년 모두 닮은 꼴이다. 또 2016년과 2024년 모두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탄핵에 찬성하는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2016년에는 민주당 등 야당 172명,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은 128명이었는데, 전반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분위기가 었다.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절반에 가까운 62명이 찬성표를 던져 탄핵안도 어렵지 않게 가결됐다.

2024년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192명으로 당시보다 20명이나 더 많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08명)들이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 투표에서 3명만 참여하는 바람에 탄핵안 자체가 부결됐다.

이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만 남았다. 현재의 시간이다. 과거 헌재는 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3개월 이상 끌지 않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2개월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3개월 여만에 파면을 결정했다.

국민들은 "국민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으로, 과거 탄핵 사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현재의 빠른 심리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조기 대선 치러지나

짧게는 내년 2월... 길게는 8개월 걸릴 듯

공석인 재판관 3명 국회 추천 몫 이달내 임명동의안 처리 방침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조기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밖에 없어 덩달아 대선 시기도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헌재 탄핵 인용을 가정해 유력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시나리오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가량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검경 수사의 칼날이 죄여오고 있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이전에 하야하는 경우에는 최대 2개월 이내인 내년 2월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최근 담화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헌재 심판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하야 가능성은 낮다.

또 헌재 심판 시기에 따라 조기 대선의 일정은 짐작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최장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 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가 집중 심리를 하기 때문이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2달(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빠를수록 조기 대선 시기도 앞당겨진다.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기를 고려 내년 3월말까지 탄핵 판결을 완료하면 2달 뒤인 2025년 5월에 대선 가능성이 있고, 180일을 모두 채워 선고하면 내년 8월께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 75% 탄핵 찬성 했다

尹 지지 11%·1020 세대 3%·30대 6%...광주·전라, 88% 탄핵 찬성

갤럽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온 국민의 바람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인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민 75%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12월 2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1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인 12월 1주차 조사보다 5%포인트(p) 추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역대 최저치이기도 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는 의견을 보류했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국민의 탄핵 열망이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2030 청년층에서 지지율은 최저치를 보였다. 18·29세에서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에 불과했고, 30대에서도 긍정 평가는 6%에 머물렀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 '비상계

엄 사태'(49%),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하다'(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이 각각 5%였다.

윤 대통령 탄핵에는 75%가 찬성했다. 21%는 반대, 4%는 모름·응답 거절에 답했다.

지역별 탄핵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88%로 가장 높았고 서울(81%), 인천·경기(79%) 순이었다.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에서도 '탄핵 찬성'이 6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27%, 반대는 66%로 집계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탄핵 찬성이 97%, 반대가 3%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는 응답은 71%, 내란이 아니라는 응답은 23%, 모름·응답 거절은 6%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4년4분기 직무 긍정률은 2016년 10월 4주간 평균 24%에서 11~12월 6주간 평균 5%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였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